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	-----

발의연월일 : 2025. 3. .

발 의 자 : 김석곤, 김민수, 신순옥,
정광섭, 박정수, 이철수,
정병인, 지민규, 오인환,
윤기형, 편삼범, 이현숙,
이연희, 김옥수, 방한일,
박미옥, 김응규, 이정우,
윤희신, 구형서, 홍기후,
박기영, 김복만, 신영호,
전익현, 이종화, 조철기,
주진하, 오인철, 안장현,
김기서, 이상근, 유성재,
이재운, 김도훈 의원(35인)

1. 개정 이유

환경분쟁 조정 및 건강영향조사 등의 제도가 담당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들을 통합하고자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이를 도 조례에 반영하고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안 제9조 및 제10조)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와 환경분쟁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회부 절차 등(안 제11조)

-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안건 회부절차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라. 공시송달(안 제15조)

-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게시하는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5. 3. 6., 인구전략국)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5. 2. 28.,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5. 2. 20.,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와 도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

무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 중 연임되지 아니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및 분쟁 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 건강피해 및 환경분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조사관 지정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된 건강피해 및 환경분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9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본 조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조정·재정·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재정·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재정·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본 조례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검토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심위원)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참고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재정·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 청사 게시판이나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감정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제19조제2항제4

호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충청남
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
정은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처
분 및 결정으로 본다.

제4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
시 종전의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위원회의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사무가 분장된 심사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관으로 보고, 종전의 같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관계 전문가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로 한다.

[별표]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10,000원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책임재정 또는 중재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참가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신청	5,000원

비고

1.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15조제2항 및 제63조에 따른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3조(심사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된 환경분쟁사건마다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

을 지명하여야 하고,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의 규명 및 환경피해액 산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 조정·재정·중재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를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 전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5조(규칙 제정 등)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추진을 위한 참석수당 등 비용이 발생하나 위원회 추진은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가 활동하여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비용추계로 대신하고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_ 비용추계 제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상임위원의 역할을 수행함

○ 안 제9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소관 분쟁접수 사건 처리을 위한 현지조사, 심사보고서 검토 및 작성, 회의참석 수당등 비용 발생 _ 비용추계

○ 안 제10조(조정·재정·중재*위원회)

- 조정·재정·중재위원회소관 분쟁접수 사건 처리을 위한 현지조사, 심사보고서 검토 및 작성, 회의참석 수당 등 비용이 발생하나 이미 기존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_ 비용추계 제외

*알선·조정·재정·중재의 정의

구분		정의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안 제12조(주심위원)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주심위원을 지명할 경우 주심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등 비용발생 _ 비용추계

○ 안 제13조(전문위원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수당·여비·감정료 등 비용발생 _ 비용추계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상

○ 안 제9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 안 제12조(주심위원)

○ 안 제13조(전문위원 등)

나.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는 주심위원을 제외한 9명(내부 1명, 외부 8명)으로 연 2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사건처리는 안전검토, 회의참석으로 1건의 사건당 총 2회의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보건위원회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련된 사무가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로 이관되며, 최근 5년('21.~'25.)간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는 단 한 건도 없었음

- 주심위원은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위원중 1명으로 연 10건(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2건, 조정·재정·중재위원회 8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사건처리는 사건 자료 검토 및 처리방향 설정, 현지조사, 심사보고서 검토 및 교정, 회의참석으로 1건의 사건당 총 4회의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최근 5년('21.~'25.)환경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년)	2021	2022	2023	2024	2025(2.28.기준)
건수(건)	2	3	5	6	1
구분	알선2	알선2, 재정1	알선3, 재정2	알선2, 조정1, 재정3	재정1

- 전문위원·감정인·참고인은 각 1명으로 연 10건(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2회, 조정·재정·중재위원회 8회)의 분쟁처리에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80,950천원의 비용이 발생(연평균 16,190천원) 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80,950천원(연평균 16,19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안 제9조)	3,040	3,040	3,040	3,040	3,040	15,200
	주심위원 (안 제12조)	5,600	5,600	5,600	5,600	5,600	28,000
	전문위원 등 (안 제13조)	7,550	7,550	7,550	7,550	7,550	37,750
	소계(b)	16,190	16,190	16,190	16,190	16,190	80,950
□ 총 비용(b-a)		16,190	16,190	16,190	16,190	16,190	80,950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budget20@korea.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안 제9조) ≍ 15,200천원

- 연간비용 ≍ 3,040천원

- 세부내역

사업명	산출근거	향후 5년간 총 비용	비고
외부위원 회의참석 수당	100천원×8명×2회 = 1,600천원	1,600천원×5년=8,000천원	
외부위원 안전검토 수당	80천원×8명×2회 = 1,280천원	1,280천원×5년=6,400천원	
외부위원 여비	10천원×8명×2회 = 160천원	160천원×5년=800천원	
합 계	3,040천원	15,200천원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는 총 10명으로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9명 중 1명이 주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함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는 연 2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함
- 외부위원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은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2시간 미만) 100,000원, 안전검토 수당 80,000원(사건당)을 적용함
- 외부위원 여비는 교통비 일 10,000원으로 가정함

- 연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세출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안 제9조)	3,040	3,040	3,040	3,040	3,040	15,200

○ 주심위원(안 제12조) ≍ 28,000천원

- 연간비용 ≍ 5,600천원

- 세부내역

사업명	산출근거	향후 5년간 총 비용	비고
주심위원 사건자료 검토 및 처리방향 설정수당	150천원×1명×10회 = 1,500천원	1,500천원×5년=7,500천원	
주심위원 현지조사 수당	150천원×1명×10회 = 1,500천원	1,500천원×5년=7,500천원	
주심위원 심사보고서 검토 및 교정	150천원×1명×10회 = 1,500천원	1,500천원×5년=7,500천원	
주심위원 회의참석 수당	100천원×1명×10회 = 1,000천원	1,000천원×5년=5,000천원	
주심위원 여비	10천원×1명×10회 = 100천원	100천원×5년=500천원	
합 계	5,600천원	28,000천원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 개최시 1명의 주심위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함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연 10건의 사건(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2건, 조정·재정·중재위원회 8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함
- 주심위원의 수당은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주심위원의 사건자료 검토 및 처리방향 설정 150,000원, 현지조사 150,000원(일당), 심사보고서 검토 및 교정 150,000원을 적용함
- 주심위원 여비는 교통비 일 10,000원으로 가정함

- 연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세출	주심위원 (안 제12조)	5,600	5,600	5,600	5,600	5,600	28,000

○ 전문위원 등(안 제13조) ≍ 37,750천원

- 연간비용 ≍ 7,550천원
- 세부내역

사업명	산출근거	향후 5년간 총 비용	비고
전문위원 사건 자료 검토	100천원×1명×10회 = 1,000천원	1,000천원×5년=5,000천원	
전문위원 현지조사 수당	150천원×1명×10회 = 1,500천원	1,500천원×5년=7,500천원	
전문위원 의견서 작성	150천원×1명×10회 = 1,500천원	1,500천원×5년=7,500천원	
감정인 의견서 작성	300천원×1명×10회 = 3,000천원	3,000천원×5년=15,000천원	
참고인 참석 수당	25천원×1명×10회 = 250천원	250천원×5년=1,250천원	
전문위원 등 여비	10천원×3명×10회 = 300천원	300천원×5년=1,500천원	
합 계	7,550천원	37,750천원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 개최시 각 1명의 전문위원, 감정인, 참고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함
-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연 10건의 사건(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2건, 조정·재정·중재위원회 8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함
- 주심위원의 수당은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사건 자료 검토 100,000원, 현지조사 150,000원(일당), 구조물 평가 300,000원(평가대상 20건 미만), 의견서 작성 150,000원을 적용함
- 전문위원 등 여비는 교통비 일 10,000원으로 가정함

- 연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세출	전문위원 등 (안 제13조)	7,550	7,550	7,550	7,550	7,550	37,750